

< 要 約 >

들어가는 말

- 한국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21세기의 시대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임

한국 교육의 성과

- 초기 일반 대중의 교육 기회 확대에 주력한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단순 노동력을 공급함
 - 70년대 이후에는 우리 나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 인력의 확보를 위해 고등 교육 확대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였음
 - 또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교육 팽창의 주요 동인이 됨

최저 비용 교육의 한계: 한국 교육의 현황과 문제

- 우리 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창의력 극대화보다는 획일적·단편적 사고의 소유자를 양산함
 - 획일화된 단일 교육 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여 학습동기의 유발, 학습효과의 극대화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님
 - 학교 건물 및 위생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 시설도 시대에 뒤떨어짐
 - 너무 많은 담당 학생수 등 과도한 업무와 근무의욕 진작을 적절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처우, 행정관리직 중심의 교원 인사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교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음
 - 대학생의 분야 또는 전공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며, 졸업생의 질적 수준 및 직업 준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교육이 부족하며, 지역 전문가 양성 및 세계 시민 소양 교육 등도 미흡함
- 과도한 사교육 활성화로 획일적인 수업료에 따른 역진적인 사교육비 부담구조, 학교 수업의 선행 및 반복 학습에 불과한 과외비 위주의 사교육비,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저가의 대량 교육은 교육 결과의 부실과 신규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관계한 기업의 요소비용 증가를 가져옴

21세기 한국 교육 발전 방안: 기업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 정보화 사회에서는 열린 평생학습체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됨
 - 이러한 열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제도, 교육내용에서의 획일성 탈피, 교육체제의 개방, 교육소비자 운동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함
-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교육의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여건의 개선,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개별화된 학습전략 개발, 정규 교과 외에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 적극 수용, 공교육체계의 경직성 탈피 등이 필요함
 -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의 입시 정책과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선발 기제의 개발이 필요함
 - 학습하는 능력의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다양한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일반화를 통해 정보화에 대응하여야 함
 -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인력, 국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학력인증 및 자격증제도의 혁신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경쟁 체제와 질 관리체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요함
 - 교육 행정 및 재정 지원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재정의 확보 등이 필요함

들어가는 말

지식기반경제, 즉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동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과 체제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함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맞이할 사회환경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고 부른다. 즉 여태까지의 문명의 발달이 물품의 생산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미래의 경제 구조에서는 지식의 생산, 보유, 활용이 경제 활동의 주요 내용을 이루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가 인류를 단순작업에서 벗어나 보다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고 나머지 여가를 즐기게 해줄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소수의(5~13%) 창조적인 지식 노동자(knowledge worker)만이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성인이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Rifkin, 1995)도 존재하고 있다. 정보화 기기의 도입은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즉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 산업으로의 전환보다 근원적이다. 종전에는 새로운 산업 구조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기존 산업의 유희인력은 새로운 산업에 흡수되었으나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희인력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촌, 공장, 사무실의 전 분야에서 정보화 기기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의 명예퇴직 사태는 이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에 근거리 통신망(LAN), 인트라넷, 그룹웨어 등의 도입에 따라 전통적인 의사 전달 채널로서의 중간관리자가 불필요해졌다는 해석도 있다. 지식기반경제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활동,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었던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공급한
한국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21세기의
시대적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의 패러다임과 체제 또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역시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였던 교육과 결부되어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양성,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는 정치 발전의 희생이 뒤따랐으며, 사회의 가치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이 양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뒤져 있다는 논의 또한 무성하다. 학교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때때로 고급 인력의 실업난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간의 격차도 자주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어 지금까지 교육이 국가발전 과정에서 수행해왔던 역할이 향후 정보·지식 사회에서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며 나아가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시대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교육의 성과

한국 교육의 변화를 주도했던 변화 동인은 크게 세계 체제 요인과 국가 체제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세계 체제 요인은 미국 교육 제도의 이식, 서구의 지식과 학문의 이전, 외국의 재정 지원, 국제적 교육 동향, 국제 정세의 변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국가 체제 요인으로는 발전주의

초기 일반 대중의 교육 기회 확대에 주력한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단순 노동력을 공급함

국가(development state)의 도구적 교육관,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의 강력한 통치권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 과제 등 국가 권력 체제의 성격 및 산업화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등의 제도적 요인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학력주의 등의 역사·문화·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김영화 외, 1996).

50년대 말에 이미 취학률 96%를 넘어선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 여성의 높은 기본 교육 완성률, 급속히 전개된 문맹 퇴치 등은 초기의 노동집약적 산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단순 노동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화 초기부터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던 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 대중 교육 기회의 확대에 우선적으로 주력하였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 확산이 가능하였고 이는 결국 비교적 균등한 소득 분배와 활발한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0년대까지의 고등교육 정원 억제, 70년대 산업인력 수요상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확대, 80년대의 대폭적 정원 확대 등의 고등교육 정원 정책과 팽창 양상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의 변화와 상당한 정도로 상응하였으며, 고등교육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에 있어 필요한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관리직을 양성함으로써 특히 80년대 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70년대의 실업계 고교 육성 정책과 직업 훈련의 강화는 숙련 기능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초·중등의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 속의 문화는 학생들에게 질서와 복종, 규율 준수, 인내심과 같은 집단 규범에 충실한 태도를 습득시켰으며, 이와 같은 사회화는 노동시장의 사회관계 구

조와 상응하는 규범과 태도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미숙련 노동력이 노동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방 이후 줄곧 실시되어 온 도덕 교육, 윤리 교육, 국가관 교육, 국민 정신 교육 등 집단주의 의식을 강조하는 정신 교육도 직장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집단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영화 외, 1996).

한편 이와 같은 확일성과 집단주의, 순응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학교의 사회화는 초기 단계의 산업화에는 효율적이었으나, 창의력과 자발성, 경쟁력이 요구되는 후기 산업화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초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의 단합을 유도하고 국가 통합을 이룩하는 데에는 기여했을 것이지만, 정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한편으로 교육 팽창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 팽창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교육 팽창의 주요 동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 산업을 팽창시켰다. 특히 도구적 교육관은 교육의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팽창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질적 요건을 갖춘 다량의 단순노동력에 의존하였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교육 팽창의 주요 동인이 됨

최저 비용 교육의 한계: 한국 교육의 현황과 문제

우리 나라의 교육은 양적 성장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초기 산업화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 높은 교육열 흡수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문제점도 유발함

해방이후 정부는 한정된 교육 재원으로 많은 학생 수를 학교에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다부제 수업 실시, 야간 학교 제도의 도입, 학급당 학생수의 최대화, 다양한 단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확충, 사립 학교의 설립 권장 등은 짧은 기간동안 초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로서 초등교육의 단위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별로 볼 때에 단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높은 학교급보다 단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초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배분한 것 역시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학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산업화 초기부터 고등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던 남미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가 초등교육의 보편화 이후 차차 윗 단계의 학교급으로 투자를 조금씩 이행시켜 갔다. 이와 같이 교육 여건 및 질과 관계없이 초등교육 학령 인구를 학교에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제도 및 정책은 초기의 노동집약적 산업화에 요구되는 양질의 단순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이었다.

교육의 양적 성장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높은 국민적 교육열의 수용, 국민 각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양적성장은 전반적인 국민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경제 발전에의 기여,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우

인문숭상주의에 따른 인문·사회교육 과잉, 입시위주 획일적 암기 교육에 따른 수동적 평균인 양성, 지나친 경쟁으로 협동심 육성 미흡, 교육을 수단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교육관 형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선 전통적인 인문숭상주의의 영향으로 인문·사회교육의 과잉을 유발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은 경시되어 왔다. 그 결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이 미흡했다. 또한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암기위주 교육은 창의적 인간보다 수동적 평균인을 양성해 왔고, 경쟁심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교육으로 인해 협동심 육성이 미흡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이웃을 길러내는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에는 소홀하였다.

그 결과 교육은 신분과 지위상승을 위한 수단이라는 왜곡된 교육관이 형성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운영으로 인하여 교육체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고,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왔으며, 지원보다 규제위주인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교육운영의 합리성·능력성·효과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교육투자가 저조하고 사교육비가 높은 점, 그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학문적 경쟁력이 약한 점 등은 모두 교육의 양적 성장 이면에 있는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교육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부정적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 및 창의적 인간양성 교육 미흡

창의력 극대화보다는 획일적·단편적 사고의 소유자를 양산함

초·중등학교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교육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교육과정이 획일적·과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편적 지식과 암기 위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획일적·단편적 사고의 소유자들을 양산해 왔다. 또한 입시만능의 풍토 하에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발달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알고 지키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¹⁾.

2. 부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

획일화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여 학습동기의 유발, 학습효과의 극대화에 심각한 문제점을 자남

획일화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킨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적어도 고교 단계에서 다양한 계열별 교육과정을 제시하거나(프랑스, 스웨덴), 다양한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미국, 영국, 일본), 과목별로 난이도나 학습량에 따라서 2-3가지 코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일본)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목별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각 주제에 대한 백과사전식의 설명을 비교적 균등한 길이로 나열하고 있어서 피상적인 내용 제시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의 흥미 유발도, 풍부한 내용 전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이용숙, 1992)를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학 수업내용의 70%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30.7%에 불과하게 나타나는 등 학습 동기의 유발, 학습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

1) 우리 나라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학교외 공부 시간은 평균 2시간 7분으로 일본(1.0), 대만(1.9), 미국(0.8) 보다 월등히 많다. 과도한 가정 과외 학습을 위해서 취미, 오락, 독서, 운동, 수면 시간을 희생하고 있으나 지적발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학습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되고 있다.

3. 낙후된 교육환경

학교 건물 및 위생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 시설도 시대에 뒤떨어짐

공공시설 및 일반 생활시설의 급속한 현대화 추세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20~30년 이상 오래되어 낡고 조명이 밝지 못하며, 냉·난방이나 화장실 시설 등이 열악하여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물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 법정 보유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70% 이상이 286급이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Internet 등의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4. 침체된 교직사회

너무 많은 담당 학생수 등 과도한 업무와 근무의욕 진작을 적절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처우개선, 행정관리직 중심의 교원 인사행정 제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교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초등교육 28명, 중등교육 25명, 고등교육 34명으로 외국보다 많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초등학교 43명, 중학교 29명, 일반계 고등학교 27명으로 과다하며, 수업 시간에 있어서 국민학교 고학년 담당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이 넘는 등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또한 교원 처우개선을 근무의욕과 사기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체계가 미비하다. 또 교원 자격 및 인사행정 제도가 교수-학습 중심의 전문성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국립 교대 및 사대 졸업생의 무시험 임용제도 폐지²⁾ 이후 우수 교사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공개임용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대와 사대의 입학생 자질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직교

2) 199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폐지됨.

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그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강무섭 외, 1994: 68-70).

5. 대학 교육의 수월성(秀越性) 저조

대학생의 분야 또는 전공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며, 졸업생의 질적 수준 및 직업 준비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교수 1인당 학생수, 강의 부담, 연구비 액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들과 세계 유수의 대학들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김수곤, 1994: 49-69). 열악한 대학 교육 여건은 대학 교육의 수월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대학 교육의 수월성 저하는 교육활동과 연구활동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학이 길러내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분야 또는 전공별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졸업생들의 질적 수준, 직업에의 준비도 측면에서 사회와 산업계로부터 비판과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강진구, 1995: 23-40).

대학 연구활동의 양적·질적 수준 역시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27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6. 국제화·세계화 교육의 미흡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교육이 부족하며, 지역 전문가 양성 및 세계 시민 소양 교육 등도 미흡함

조기 영어교육의 실시 등 근래에 교육과정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중과 내용면에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화·세계화 대비 교육면에서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마인드 형성과 세계평

화·인류공영 등의 세계 시민 소양 교육,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이 부족하고, 국제 이해 교육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7. 사교육비의 과잉

조세에 의한 공부담
교육비를 상회하는
사부담 교육비가 중
요한 민간 부분의
교육투자로 기능함

낮은 수준의 공교육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양적 확대가 가능하였던 또하나의 중요한 민간 부분의 교육투자로 사부담 공교육비 내지 사교육비³⁾를 들 수 있다. Barnes(1960)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를 부담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28%만이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 받았으며 29%만이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과서대와 급식비는 물론 교복, 교통비, 학교지정용품 및 기타 사부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했다(Chang, 1976). 이러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함으로써 정부는 상당한 부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사교육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이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공교육비도 다시 이를 협의로 보면, 협의의 개념에 의한 공교육(국·공립학교)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광의로 보면, 광의의 공교육(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공교육을 공립학교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광의의 공교육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공교육비라고 하면 광의의 공교육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사교육비도 광의의 공교육비에 대칭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행정)기관의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각종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등이 포함된다.

그 하나는 학원, 과외교사 등에게 지불되는 과외교육비이며, 다른 하나는 각종 부교재 구입비, 교통비, 교재준비비 등 교육부대비용이다. 총량 규모로 본 공, 사교육비의 구조를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의 공, 사교육비 총 규모는 국민총생산액의 12%에 해당된다. 이중 사교육비 총액은 과외교육비와 교육부대비용을 합해서 GNP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도 경상가 표시 국민총생산액을 303조원으로 보았을 때 약 17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995년의 사교육비는 다소 그 비중이 증가되어 21조 6천억 원의 규모인데 그 증가의 요인은 주로 과외교육비 및 예·체능 특별활동비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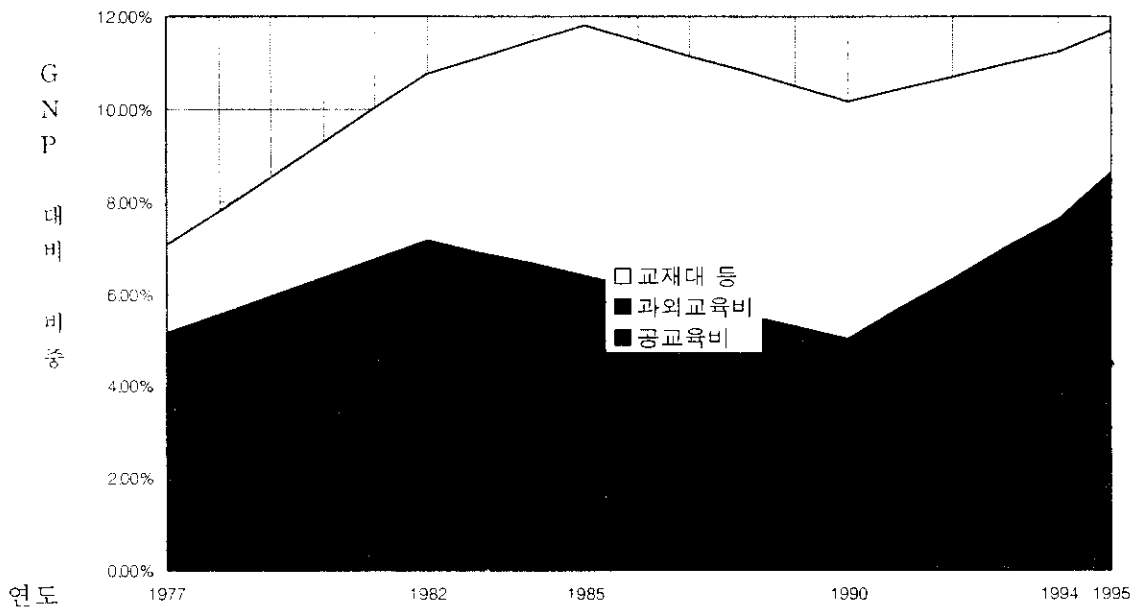
획일적인 수업료에 따른 역진적인 사교육비 부담구조, 학교 수업의 선행 및 반복 학습에 불과한 과외비 위주의 사교육비,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 등의 문제점 가짐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부담 교육비 규모가 조세에 의한 공부담 교육비 규모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부담 교육비 규모가 큰 것 자체가 바로 교육비 부담구조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담수준이 획일적인 수업료와, 학교수업의 선행학습 및 반복학습에 불과한 과외비 위주라는 점에서 사부담 교육비 위주의 교육비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지역적 및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부담분포의 분석을 통해 역진적인 사교육비 부담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투자는 교육산업이라는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물론 입시 및 수험산업 등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조달시장, 즉 교재 및 교구산업, 교육시설산업은 상당한 소득과 직업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종래와 같은 최소 단위 비용의 값싼 교육은 산업 구조가 고도

화된 경제 체제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부실, 입시위주의 획일화 교육, 과외 및 사교육의 번창은 물가 및 임금 양등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한편 타 산업활동에 쓰여야 할 고급인력을 학습산업에 불잡아둠으로써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 1] GNP 대비 공·사교육비의 비중과 변화 추이



자료: 윤정일·박종렬,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교육비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7.

김영철·공은배·이운식, 『교육투자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공은배·강태중·한유경, 『교육투자규모와 수익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0.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2호, 1996. 12. pp. 515-538.

저가의 대량 교육은
교육 결과의 부실과
신규 직원들의 교육
훈련과 관계한 기업
의 요소비용 증가를
가져옴

교육의 양적 확대는 불가분 교육의 질 향상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저가의 대량교육은 교육결과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사교육의 횡행 발미를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더 나아가 경제주체 특히 기업들의 생산요소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대학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대기업체에서 대졸인력을 6월 내지 1년간 다시 교육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날로 커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체로 공교육의 책임 약화, 곧 학교교육의 부실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교 외의 교육서비스를 높은 비용을 치뤄가면서 획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해 왔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곧 이어 소득 및 사회적 부의 불평등 분배 구조를 존속시키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처방이 제시되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러한 처방이 실행에 옮겨져오기도 하였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는 1980년의 이른바 「7.30 교육정책에 따른 과외금지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망국적 과외'를 금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당시의 과외금지 정책도 몇 해 못 가서 원상 복귀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학교내 과외까지를 허용해가면서도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교육 발전 방안: 기업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1. 한국사회의 전망과 교육의 과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열린 평생학습체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됨

21세기 미래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의 변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변화될 미래사회를 '제3의 물결,' '탈산업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양한 집단의사의 표출, 인간관계와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혁, 국제관계의 일상화 등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사회는 탈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적 경향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대의 전환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교육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그림 2] 참조).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현재와는 현격히 다른 형태의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단편적 지식의 습득, 암기위주의 교육, 수동적인 교수-학습방식, 획일적인 교육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창의적·통합적 사고력에 기초한 능동적 교수-학습방법, 다양한 학습 자원을 이용한 경험 중심 학습방법, 융통성있고 다양한 교육 운영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원양성, 교육여건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림 2]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산업사회의 교육	미래 정보화 사회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급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 수동적 지식의 전달 - 단편적 사고 및 암기위주교육 - 획일적·일방적 강의 중심교육 - 통제적 분위기 • 정해진 시간·공간에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 학교 교육 • 교육정보의 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학교 • 정보활용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개념의 정보 - 국내정보 활용 • 학위취득·학벌 중심 • 컴퓨터 사용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소비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 능동적 학습참여 및 문제해결 - 통합적·창의적 사고 증진 - 다양한 학습자원 및 경험학습 - 역동적·개방적 분위기 • 시·공의 제약을 초월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 원격교육 공존 • 교육정보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교, 학생, 학부모, 국민 • 세계 정보의 공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연구,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 활용 • 능력(자격)중심·자아실현추구 • 정보 활용 능력
학교 중심 교육체제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

자료: 김영철·한유경·조미현(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육법·제도 정비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36.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인간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틀은 열린 평생 학습체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열린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다양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는 교육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의 이념을 실현하고, 고도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

열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
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제도, 교육내용
에서의 획일성 탈
피, 교육체제의 개
방, 교육소비자 운
동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함

인력을 양성하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교육수요의 충족, 계속교육의 필요성 등에 따라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가 보다 열려야 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교육체제가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원격교육과 재택·재직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급속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게 규격성과 획일성을 탈피해야 한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기술문해력을 높이고,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태도, 행동 방식 및 의사소통 그리고 인류 공동문제에 대한 인식 및 공동 대응 등과 같은 세계이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족정체성 및 전통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원주의적 경향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교육, 인성교육, 전통문화 교육, 창의성 교육, 환경교육 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에 관한 통일대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체제의 급변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안보의식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교육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력과 교육질을 제고하기 위한 벤치마킹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교육체제의 개방을 위해 국가간에 학력과 학위 등이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에 따라 학제와 학위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주기적인 학력평가 실시, 교육시설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보·지식의 생산 기반인 대학은 연구기능

을 대폭 강화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다원주의적 경향의 진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고 아울러 참여 요구도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소비자 운동을 광범하게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축으로 하는 단위학교 자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2. 21세기 한국 교육발전 전략

가. 학교의 교육력 강화: 교육 내실화와 교육적 기능 확충

학교 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여건 중에서도 교수-학습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생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학교재건축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개별화된 학습전략이 개발·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열린 교육'이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를 중등교육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가 정규교과 외에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에서 그 기능을 확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교육 수요를 포함하여 학교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수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의 개선,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개별화된 학습전략 개발, 정규 교과 외에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 적극 수용, 공교육체계의 경직성과 관료성 탈피 등이 필요함

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필요는 학교 교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사교육 수요를 축소·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본연의 기능은 물론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실패를 가져온 공교육체제의 경직성과 관료성을 탈피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은 사교육과 비교할 때, 공교육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장(신입생 배정, 재정보조 등)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학생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서는 획일화된 정부정책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교육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사교육에 대하여 허용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공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교육체제의 자생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입시정책에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생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선발 기제의 개발이 필요함

나. 대학학생 선발 기제의 다양화

대학입시가 학교 교육을 선도하도록 입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시는 대학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이 주 기능이지만, 고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외 수요는 바로 학교 교육내용과 입시내용간의 괴리에 의해 발생한다. 학교 교육내용과 입시내용간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과외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외수요를 축소하려면 획일적인 입시내용을 학교 교육내용과 개인별로 다른 소질·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선발 기능과 학교 교육 정상화 지원 중 어느 쪽의 기능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수차례 바뀌어 왔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 입시정책의 결정

권이 개별 대학에 위임되면서 대학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보다는 선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고교내 신성적의 반영비율도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입시로 인한 과외 문제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문제 등이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입시정책에서 선발기능 못지 않게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항상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극대화하는데 있다면, 대학의 학생선발 기제도 응당 이를 반영하는 다양성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신평가제도의 개혁, 대학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학입시의 개혁이 요구된다.

다. 학교의 교육내용 및 기능의 재정립: 평생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

학습하는 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미래사회는 빠른 속도로 생성, 소멸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학교교육만을 통하여 모두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학습하는 적시 학습(just-in-time learning)이 보편화되는 학습 사회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학교에서는 고정된 지식을 암기에 의해 전수-습득하기보다는 학습하는 능력(learn to learn) 또 이를 위한 기본 학습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성인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이 생산과정에 반영되고 이는 또 다시 개별 근로자의 일의 내용과 성격을 계속해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 학교는 일회성 교육(One-shot education)이 아닌 반복회귀교육(Recurrent education)의 필요에 대해서도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일반화가 필요함

라. 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기반 확충

교육환경의 변화로 미래의 학교 모습은 기능이나 형태, 수업 운영면에서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래 학교는 종래의 출석 중심 교육기관의 성격을 벗어나 학습활동을 학생 중심으로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보급하는 재적 학생 중심 학습센터의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 학교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교육 및 학생 지도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및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관리할 수 있는 교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습기재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고도의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면대면 출석중심의 전일제 수업형태와 더불어 다양한 시간제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일반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연구되고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상대학을 비롯한 가상교육체제의 도입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그 결과 미래에는 학교 교육이 특정 국가의 폐쇄된 체제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국가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21세기의 유망 산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며 지식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지식·두뇌 집약 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라 규모에 비해 많은 인

21세기에 유망한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력, 국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노동시장 연계를 위해 학력인증, 자격증제도의 혁신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적절한 공급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약화 가능

구, 높은 교육열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틈새 산업'의 발굴 및 공략을 위해서도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로 상징되듯이 국가간에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세계화 추세 속에서는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감각을 갖춘 지역연구(area study) 전문가 및 통상·외교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을 구비한 인력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국제경쟁력의 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인력개발 정책은 국제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가교로서의 학력인증, 자격증제도도 혁신적으로 해체·재구성해야 한다. 교육개혁안이 제시한 학점은행제, 민간자격의 활성화(교육개혁위원회, 1996. 2.)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공급체제 확립
변화 무쌍한 미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유입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및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만일 이러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비용이 증대되어 결국 교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생산현장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

/훈련은 산업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삶의 질 제고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에 목표를 둔 인력개발정책과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간의 인력개발 정책은 국가발전 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의 양적 충원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만불 국민소득, OECD 가입 등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인력개발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다량의 정보들을 적기에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학습을 포함한 미래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의 양성 및 훈련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나 피훈련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일생 동안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 교육기관을 통해서든 물론 비형식적 교육 및 사회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계속 교육기회가 확대·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회적 양성훈련에 그치고 있는 교육/훈련 체제는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의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훈련 프로그램 중 양성훈련 73.0%, 향상 및 재훈련에 27.0%를 할애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경쟁 체제와 질 관리체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요함

우는 이 비중이 각각 88.2%와 89.8%로 향상 및 재 훈련에 치중하고 있다⁴⁾. 따라서 직업훈련과 학교 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 능력개발의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 동안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봉쇄라는 울타리에 의탁하여 대외적으로 무 경쟁인 상태로 안주하여 왔으며, 대내적으로도 학 문 숭상의 유교적 전통과 국민의 과잉 교육열을 배경으로 대학은 학생을 선별하여 뽑기만 하면 되는 안일에 젖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적 수월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제적 위상 제고에 걸맞지 않게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에 와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점은 길러낸 인력의 준비도 측면에서 볼 때 산업현장에서 즉각 활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많은 경비를 들여 재훈련을 하여야만 산업계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의 신뢰성에 대한 산업계의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많다.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적절하게 갖춘 인재를 길러내 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한편으 로는 자유경쟁 체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질 관리체 제를 적극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추세 일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 지면서 그에 부응하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점 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자유 경쟁 원리를 적극 도입

4) 노동부, 「종합적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계획(안)」, 1995, p.16.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질 관리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발전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경쟁 체제 및 질 관리체제의 확립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학간 및 교육 프로그램간의 자유 경쟁 유도가 필요함

(1) 자유경쟁원리의 적극 도입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간 및 교육 프로그램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면 대학들은 각기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창의적으로 혁신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대학 교육 전략은 기존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그를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경쟁은 초·중등 교육 등 타 교육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대학 교육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 등과 비교해 볼 때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규모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은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작고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의 업적 평가 및 보상 체계 등 교수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함

(2) 효과적인 질 관리체제 확립: 평가-재정지원 연계

대학 교육이 앞에서 제시한 전략 방향인 자유 경쟁 체제하에서 교육, 연구, 봉사 등 제 측면에서의 수월성이 제고되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질 관리 체제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교육활동의 핵심이 되는 교수에 대한 질 관리와 교

육·연구·봉사의 기능을 망라한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이다. 먼저 교수에 대한 질 관리는 개별 대학이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교수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업적 평가의 결과를 적절한 보상과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향의 전략을 의미한다. 교수에 대한 질 관리는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대학 교육의 질이 교수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대학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 관리 등을 통하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의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학평가-차등적 재정지원이 지니는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자. 교육행·재정 지원체제의 효율화

앞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단위 학교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교육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재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학교 단위의 자치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재정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간의 역할 배분,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재정의 확보 등이 필요함

에 대한 권한과 책임, 단계별 교육재정 배분 원칙과 기준, 교육행정 운영 및 관리 방식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특히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OECD 회원국으로 이들과 동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이들 나라 수준의 교육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이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재원의 종류, 규모 및 동원방식을 눈여겨보고 우리의 재정구조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다음과 같은 목표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재정을 1998년 이후에도 GNP 5% 이상의 선에서 유지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임시 교육재원들도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투자 재원을 확대한다. 둘째,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중앙, 지방, 민간의 부담구조하에서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구조에서 탈피해 각자의 역할을 균형있게 재조정한다. 셋째, 하급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특히 경비절감과 함께 학교자산의 개발을 통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넷째,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기회 형평성 및 정부의 책무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재정 평가제도를 정착화한다.

< 參 考 文 獻 >

- 강진구(1995),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대학 교육의 세계화
· 개방화를 위한 방향 모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강무섭 외(1994), 『한국 교육의 중·장기 발전구상』,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강태중·한유경(1985), 『교육투자규모와 수익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천세영(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I, II, III.
- 김수곤(1994), "대학재정 확충 및 학생지도 방안", 『개혁과 변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영봉·김신복·김기영·McGinn, N.F.·Snodgrass, D.R.(1980),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철·공은배·이윤식(1982), 『교육투자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김영철·한유경·조미현(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육법·제도 정비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한유경·최돈민·양승실·조준래(1996), 『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 I (1945-199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환석(1991), "정보화 사회라는 이름의 유령", 『말』, 1991년 8월.
- 대한민국정부(1992),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92-1996』.
- _____(1993), 『신경제 5개년 계획(93-97)』.
-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1988), 『문교40년사』, 서울: 문교부.
- 윤정일·박종렬(1977),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교육비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2호, 1996. 12. pp. 515-38.
- 이용숙(1992), 『한국 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III):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한국교육신문사, 『한국교육연감』, 1989-1996년도판.
- 한유경(1992),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 : 교육투자의 확대 논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DeBare, I.(1996), *Logged on or Left Out*, The Sacramento Bee.
- Gates, W. H.(1995), *The Road Ahead*, Microsoft Press.
- Negroponte, N.(1995), *Being Digital*, Alfred A. Knopf.
- OECD(1996),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OECD/CERI(1996), *Technology and Post-School Learning*.
- Papadopoulos, G.S.(1996), *Education 1960-1990 The OECD Perspective*,
Paris: OECD.
- Rifkin, J.(1995), *The End of Work*, Putnam.
- Toffler, A.(1980), *The Third Wave*, Bantam Books.